美,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 들썩

대법원장, 초안 유출 조사 지시
민주 "연방 차원 입법 추진"
공화 "대법, 압력에 굴복말라"
11월 중간선거 쟁점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3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낙태권 이슈 자체만으로도 폭발력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출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 가량 앞서 보도된 것이자,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대법원, 초안유출 진상조사 착수…법원 주변 찬반 시위에 경비 강화=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확보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까지 철통 보안을 지켜왔다. 하지만 초안 형태긴 하지만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현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중간선거때 낙태권 옹호 뽑아야"…공화당 "유출 철저 조사 필요"=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통한다.

이번 판결문 초안 보도는 정치권의 논란으로도 번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이 '친정'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반면 공화당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입장 속에 상하원 원내대표 공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유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권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이후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일본, 태국서 전기차 시장 놓고 '한판 대결' 준비

세제 혜택 프로그램 속속 가입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에서 전기차(EV)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태국의 미래 산업단지인 동부경제회랑(EEC)에 올해 내로 전기차 투자를 약속했다고 태국 현지 매체인 네이션이 3일 보도했다.

태국은 동남아 최대 차량 생산국이다.

태국은 시대 흐름이 점차 내연기관에서 EV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30%인 약 72만5천대를 EV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EV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 소비세국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7만~15만 밧(약 260만~5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네이션은 전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3년 째부터는 태국에서 만드는 EV 대 수입 EV 비율을 1대 1로 만들어야 하고, 4년째에는 그 비율을 1.5대 1까지 늘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종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태국 내 EV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중국의 하발이나 MG가 가입했다. 일본 도요타도 지난달 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요타는 올해 하반기 EV 모델을 태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지리차와 창안차도 관심을 보인다고 네이션은 전했다. /연합뉴스

전통 혼례 의상 입고 단체결혼 준비하는 인도 신부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의 주도 보팔에서 3일(현지시간) 전통 혼례 의상을 착용한 신부들이 단체 결혼식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군 극동·시베리아서 전쟁 인력 차출

수도 모스크바는 예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극동 지역에서 군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수도 모스크바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전쟁을 서방 국가들과 싸움으로 규정하는 선전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 상당수는 모스크바에서 먼 지방 부대에서 왔다.

부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부대도 모스크바 동쪽 6천㎞ 넘게 떨어진 작은 마을에 기지를 두고 있다.

전쟁 초기엔 러시아 군인들이 우체국에서 약탈품을 시베리아 외딴 지방 등으로 보내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러시아 독립 뉴스 웹사이트 메디아조나는 러시아군 사망자 대부분은 동부 시베리아와 북캅카스 지역 출신이고.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은 없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 안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지난주 헤르손 근처에서는 극동 불교 공화국 부랴트 출신 군인들이 북캅카스 체첸 무슬림 군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차출된 부대 중에는 군 소방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가 사람보다 소중?

인도서 또 '소 도살' 시비 살인

인도에서 또 '소 도살'과 관련한 시비로 인해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전날 새벽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세오니 지역에서 토착 부족민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약 2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다.

남성 무리는 전날 몰래 소를 도살해 밀매했다는 이유로 피살된 부족민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은 소를 죽였다고 비난하며 해당 부족민들을 공격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두세 명을 체포했고 다른 이들도 입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자 2명 외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피해자의 집에서는 소고기 12㎏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의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인도 인구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여기며 신성시한다.

특히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후 극단적으로 소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부 보수 힌두교도들은 소 도축 등을 감시한다며 '암소 자경단'까지 결성, 각종 폭력을 일삼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극우 힌두교도들이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소 도살과 관련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힌두교도들은 경찰이 소 도살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 초소를 비롯해 차량 여러 대를 불태웠다.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시위대가 쏜 총에 맞고 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